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통해 배우다

- 코로나19 대응 정책분석 연구 통합발표회 개최
- 국내외 코로나19 대응 성과 및 한계 분석을 통해 다음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시사점 도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16일(화) 9시 10분,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코로나19 대응 정책분석 연구 통합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미래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를 위해 지난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민간 전문가 주도의 백서를 포함한 3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로 발표된 연구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주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 분석 및 평가」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을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기록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위한 핵심 질문*을 발굴하여 전문가회의체 논의를 통해 질문별로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 공중보건 대응체계, 의료 대응체계, 사회적 대응과 인권, 보건안보 차원의 바이오 R&D, 근거 부족 시 의사결정 및 위기소통, 국제보건협력 및 법령·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진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 또는 유입되는 경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진단제, 치료제, 백신 등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연구개발(R&D) 거버넌스 운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 보건 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 개발 외에 다제내성균, 의료 관련 감염증 등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발표된 「해외 팬데믹 대응 평가 및 시사점 도출」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연구로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스웨덴 등 해외 주요 7개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교·분석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보건 협력체계의 성과·한계를 검토하여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건의료체계 회복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 수준의 전략을 넘어 범지구 수준의 국제보건 분야 개발 협력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코로나19 진단키트 초기 개발과 같이 한국의 첨단 바이오메디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글로벌 보건 외교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구축·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개발」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한 연구로, 감염병 위기 대응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병청 등 방역당국이 채택하고 있는 확진자 수, 치명률 등의 방역·의료 지표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다양한 사회경제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연구진은 제시된 사회경제지표를 통해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치명률, 유행 속도 등 감염병 특성에 따라 지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금일 통합발표회를 통해 논의된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http://www.pris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미래 어떤 감염병 위협이 닥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 결과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이행 과정에 참조하고 민간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3-719-9050)
	총괄조정팀	담당자	사무관	정혜원 (043-719-9061)

